

| 위원회 동정_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위원회 |

ILO 기본협약 기준을 위한 공익위원 합의안 도출 이후 후속과제 논의

김미영 전문위원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합리적인 노사관계 제도와 관행 개선은 물론, 노동기본권의 실질적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해 '18.7.20. 출범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차 과제였던 'ILO 기본협약 기준을 위한 단결권 확대'에 대한 공익위원 전체 합의안을 도출했다. 공익위원 합의안은 언론브리핑과 기자간담회 등 공론화를 거쳐 국회에 전달됐다. 그 결과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를 존중하여 '18.12.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2019년 1월부터는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범주에서 의제를 선정하고 노사관계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논의를 진행해왔다. 의제는 노사가 제시한 많은 것들 중에서 성격상 ILO 기본협약 기준을 위해 직접적 필요성은 낮지만 간접적으로 연관성이 강한 것을 기준으로 선정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주요의제 5개씩을 선정하여, 4차례에 걸쳐서 개선의 원칙과 구체적인 입장을 중심으로 각자의 요구안을 발제하였다. 이에 대하여, 노동법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은 노사의 요구안을 법체계 및 공익의 관점에서 수정·보완한 검토안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10여 차례가 넘는 발제와 집중토론을 진행했다. 이러한 과정은 합의 가능성을 떠나서 가능한 모든 대안을 펼쳐 놓고 탐색할 수 있는 기초단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간 전체회의를 진행 하던 중에 예상치 못한 일도 발생하였다. 노동계 위원이 퇴장하는 갑작스러운 사건에 이어, 토론 자료로 제출된 특정 공익위원의 발제문이 공익위원 전체 합의 안으로 외부에 알려지면서 큰 혼란을 겪었다. 특히, 전체회의 진행 과정을 잘못 오해한 일부 단체가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뿐 아니라 개인을 특정하여 비난하는 사태로 인해서 많은 공익위원들이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어느 노동단체의 회의장에서 특정 공익위원의 실명까지 거론되었고, 공식적인 확인 절차도 없이 개인의 거취 문제가 언론에 공개되고 말았다. 이로 인해서 결국 2명의 공익위원이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사퇴의사를 표명하고 이후 회의에 불참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노동계, 경영계, 정부 그리고 다른 공익위원들은 깊은 사회적 책임감과 소명의식으로 그간의 노력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영역에서 선정된 의제를 다룬 2단계 논의가 거의 마무리될 시점이기 때문이다. 그간 진행한 논의 과정을 재점검하고 회의체 운영상의 실수와 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현 단계 의제와 관련하여 노사정 합의를 목표로 하는 협의도 지속하고 있다.

발족취지: 노동존중사회 실현의 주체인 노사 당사자가 상호 존중과 협의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방안 마련 및 대등하고 자치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동기본권의 실질적 보장 방안과 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 '18.7.20. 발족